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0-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3월 첫째 주 정세동향

2010년 3월 4일 목요일

<차례>

1. 세계경제

- 미국 금융규제안과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는 치유되고 있는가

2. 국제정세

- 그리스 총파업
- 국제 분쟁지역 리포트

3. 한국경제

-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예상 의제
- G20 송도회의서 핵심의제 로드맵 마련

4. 민중운동

-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및 교수, 노동자 입당
- 사회당 45차 중앙위원회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발족

5. 노동

1) 총연맹

- 사무처 개편

2) 금속노조

- 대림자동차지회 본관 점거농성
- 한진중공업지회 협상타결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금속노조 특단협
- 금속노조 2010년 산별교섭 공동 요구안

3) 교사, 공무원, 공공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및 철도노조 대응

4) 기타

- 철도노조 상반기 투쟁계획 수립
- 화물연대 상반기 투쟁 안

■ 세계경제

1. 미국 금융규제안과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는 치유되고 있는가? (사회화와 노동, 3β)

2009년 말, 2010년 초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적 전망은 미약한 회복으로 전환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사정 개선도 지연되고, 가계부채 조정도 지속되겠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기관 부실 확대나 과다채무국의 외환사정 악화,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었다. 세계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곧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요인들이 차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2010년 미국 금융개혁 전망과 그리스 사태를 살펴보면서 위기 요인이 거의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며 2007-2009년 위기 이후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이러한 위기를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상실했고, 더 큰 위험에 직면하여 임기응변, 미봉책으로 위기의 폭발을 봉합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안

2010년 1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막고 대마불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범위와 영업규모를 제한하는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은 실업률이 10%대로 치솟고 2009년 미국 재정적자가 1조 4,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는 위기의 주원인을 제공했고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대형은행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번 금융규제안 발표 직전에도 미국 정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시티그룹, 아메리카은행,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를 겨냥해 미국 50여 개 대형은행에 대한 '금융위기 책임세'라는 특별과세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너스로 줄 자금 여력이 있다면 납세자들에게 받은 돈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사에 최소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월에 발표한 금융규제안은 우선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보유하거나 그것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은행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식, 채권, 옵션, 원자재,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며 고객의 요청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은행이 위험성이 높은 주택담보증권(MBS)을 활용한 자기계정거래가 대형은행 부실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 규모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하향조정하고 예금 이외에 자금조달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안이 실행되면 시티그룹, 아메리카은행,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같이 자기계정거래 비중이 높은 대형은행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예를 들어 JP 모건체이스는 운용자산 규모가 210억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 하이브리지캐피탈매니지먼트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부문 운용자산의 약 40%가 자기계정거래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JP 모건체이스는 금융규제안이 2011년에 실행된다면 주요 은행의 주당순이익(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 최대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안은 투자은행 유형의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광범위한 업무에 비해 매우 협소한 범위에 가해지는 제한적인 규제라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또한 고객의 이익을 위한 투자 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헛정(회피)하기 위한 투자와 자기계정거래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즉 오바마 정

부가 제안한 규제안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강제했던 글래스-스티걸법에 미달하는 미세조정안일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정치지형을 볼 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상실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중도파 의원 모임인 신민주당연합은 월가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 하원을 통과한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안'은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미국에서 입법 과정은 하원의 단일안 마련과 표결, 상원의 단일안 마련과 표결, 상하원 법안 통합과 표결, 대통령 최종서면이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또한 이런 규제안을 미국만 실행할 경우 미국계 은행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반발이 상당히 클 것이다.

2009년 봄 미국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자본충실도 평가)는 사실상 매우 관용적이었다. 미국 은행은 추가 손실을 견딜 만큼 충분한 자본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금융규제가 유아무야 넘어갈 경우 미국 은행은 더블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리스 재정 위기와 유럽통화동맹의 모순

2월 11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왜 회원국 지원에 대해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유럽연합과 유럽통화연맹(EMU)이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단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연방은행이나 영국정부는 회원국이 국가부도를 우려한다면 구제금융 제공과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낮고 유럽연합이 체결한 <안정성장협약>, 즉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협약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에 유럽통화동맹 회원국의 구제와 구조조정을 위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럽통화동맹 결함을 자인하고 유로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연합 차원의 구제금융 제공도 선택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규정상 회원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다른 정부가 인수할 수 없으나(구제금융금지 조항)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 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보조항이 있어 구제금융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로부터 부채를 인수한다면, 자국 국민 세금으로 타국의 부실을 떠안는 셈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동반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그리스 정부에게 계속 추가적 긴축안을 요구하면서도 지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 여기에도 유럽통화동맹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통화동맹은 단일환율이 적용되었다. 유럽 경제가 그러저럭 잘 돌아갈 때는 환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자본이동도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확대되면서 유로화 도입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한 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유로화가 출범한 1999년 이후로 회원국별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 경계가 분명히 나타났고, 특히 적자국은 상품수지 적자액 중 역내 적자액이 90%에 육박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해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는 한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시도할 수 없다.) 또한 유로존 국가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확장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확장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이 재정정책의 팽창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즉 유로존 국가는 독자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실행할 수단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지극히 제한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통화동맹에 속한 주변국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정부 재정적자의 팽창이라는 경향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유럽통화동맹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통화안정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는 무역조건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중심국, 특히 독일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통화정책은 독일이 지배하는 유럽중앙은행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재정정책에는 심각한 제한이 가해졌다.) 경쟁력이 뒤쳐진 국가는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함으로써 확장정책이나 평가절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것만 남는다. 유럽통화동맹은 중심국 자본에게 항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조건에서 그리스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긴축, 임금동결에 동의하며 총파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 국제정세

1. 그리스 총파업

유럽 발 금융 쇼크(중앙일보, 2/8)

유럽 신용불안의 진원지는 일명 'PIIGS' 그룹: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그중에 그리스가 가장 심각한 편. 그리스 정부는 최근 재정적자 규모를 2012년 GDP의 2.8%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공공부문 보너스 및 고용 감축, 정부 운영비 축소 등을 통해 지출을 축소하고, 주류세 인상과 세금 탈루 방지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릴 계획. 그러나 내부의 정정불안도 큰 변수. 지난 3일 유럽연합(EU) 집행위는 그리스가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승인했으나 그리스 공기업 노조는 공공부문 임금 동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선언.

포르투갈은 올해 공공부문 임금 동결, 공공서비스 축소, 은행 보너스에 대한 과세 확대, 기업감세 혜택 축소, 공기업 민영화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2월 10일 그리스 공공노조 24시간 총파업 돌입(중앙일보, 2/11)

그리스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나 되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그리스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수당을 10% 삭감하겠다고 발표. 이에 2월 10일 1만여 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공무원 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파업 시위 진행. 2월 10일 오전 0시부터 약 60만 명이 속해 있는 그리스 공공노조연맹(ADEDY)의 24시간 시한부 파업이 시작됨.

집회와 파업은 그리스 전역에서 요란하게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반응은 냉담. 최근 그리스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7명이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전날 "정부가 약속한 긴축재정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언급. 파업을 감수하겠다는 것. 그리스 정부는 무연 휘발유에 L당 0.14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고, 주유소·택시 등으로 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조치도 발표. 민간 기업의 정년을 63세로 2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 조합원 200만 명을 둔 최대 민간 노조인 노동자총연맹(GSEE)은 24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발표.

국제사회는 그리스 정부가 노조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노조의 반발에 긴축재정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큼.

남유럽 총파업 저항(중앙일보, 2/25)

그리스 노동계는 24일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24시간 총파업에 돌입. 10일 첫 총파업 때 공공 노조 소속 공무원 60만여 명이 참여했지만 이번엔 2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영 노조 GSEE도 합류. 이로 인해 관공서·학교·병원 등 공공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항공기 500여 편이 취소됐고 아테네의 지하철·전차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행됨. 이날 파업엔 언론인들도 동참해 그리스 언론매체가 일제히 보도 기능을 멈췄다. 3만여 명의 노동자는 아테네 시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임.

스페인 양대 노조인 UGT와 CCOO도 23일 마드리드·바르셀로나·발렌시아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 법정 퇴직(연금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현지 조사에 따르면 반대 여론이 84%.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의

11.4%였던 스페인은 2013년까지 3% 이내로 낮추기 위해 향후 3년간 500억 유로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를 위해 퇴직 연령을 올려 연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스페인 노조는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 포르투갈에선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다음 달 4일 총파업을 예고. 이들도 지난해 GDP의 9.3%였던 재정 적자를 1%포인트 낮추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 포르투갈 정부는 2013년까지 적자를 GDP의 3%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계획을 EU에 제출할 예정.

그리스 정부 추가 긴축안(매일경제, 3/3)

그리스 정부는 세금 인상과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총 48억유로(7조5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내용의 추가 긴축안을 3일 오전 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 추가 긴축안은 48억유로(64억9000만달러) 규모로 담뱃세와 주류세 추가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공무원 보너스 추가 삭감 등.

정부의 방침에 맞서 그리스 공공노조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 이는 사회당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인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내놓은 이래 세 번째 총파업.

공공노조연맹은 "경제 문제를 풀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불공평하고 사회복지에 어긋나는 대책들을 무산시킬 때까지 거리로 나가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EU와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발언.

2. 국제 분쟁지역 리포트

1)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거점 남부 마자르지역 2월 13일부터 1만 5천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공세 시작하여 장악함. 연합군 8월까지 주둔할 계획.

-탈레반 지도부 파키스탄으로 빠져나갔다 파키스탄 정보국에 15명 검거. 탈레반 2인자이자 군사조직 총책임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 최고 지휘관 압둘 카비르 포함.

-NYT는 이번 거물급 인사 검거에 대한 음모론 제기. 아프간 문제에서 파키스탄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차단하기 위한 검거라는 것. 바라다르는 탈레반 내 협상파로서 미국과 아프간 정부와의 접촉 채널로 역할 해온 인물.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탈레반과의 협상에서도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됨.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 꼴.

-네덜란드 아프간 철군 논쟁으로 기독교당과 노동당의 연정 붕괴. 2006년부터 주둔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파병 규모는 1950명.

2) 이라크

-3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있음. 현재 총리인 누리 알 말리키는 '법치국가 연합'(친미 시아파 세력) 소속으로서 재선을 노리고 있음. 가장 지지도가 높은 세력이기는 하지만 전후 재건에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고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반 후세인 정치공작을 피고 있음. 바트당 출신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금지한 것. 후세인지지 세력이 위협적 이라기보다는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시아파 '이라키야' 세력(전 총리 이야드 알라위가 이끌고 있으며 세속주의, 민족주의 표방)에 타격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 됨. 그러나 이라크가 종파간 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음. 시아파는 2006~7년 수니파를 사실상 제압. 석유 자원과 영토 문제에 대해 아랍민족과 쿠르드족의 입장이 매우 다르지만 양측이 싸울 경우 양쪽 모두 잃을 게 더 많다는 입장을 공유.

-이라크 알-카에다(AQI)는 지난달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총선을 막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3월 7일 바쿠바 지역의 폭탄 테러로 33명이 사망. 총선 안정 실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3) 이란

-2월 3일 인공위성 발사체 실험 성공. 2월 7일 이란 정부 우라늄 농축 20% 높이겠다고 발표.

-IAEA는 2월 18일 발표한 10쪽짜리 이란 보고서 발표. 그동안의 신중한 입장에서 "이란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쪽으로 선회. 또한 우라늄 농축을 확인하면서 이란이 진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이 보고서는 3월 1~5일 원자력기구 이사회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될 예정.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에 돌입할 예정. 3월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논의 될 것임.

■ 한국경제

1.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예상 의제

* 『한국의 G-20 리더십』, 한국금융연구원(2009.12.)에 실린 신재윤(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요약문 중 26~29페이지를 요약함.

1)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방안

-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는 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춤. 하지만 2010년 11월경이면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이후의 관리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절차에 합의했고, 지난 스코틀랜드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방안 및 구제 일정에 합의했다. ①공유할 정책 목표에 합의 → ② 회원국들은 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 자료 제출(2010.1.) → ③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중기 정책 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2010.4.) → ④ 정책대안 제시(2010.6. 정상회의) → ⑤ 구체적인 정책제안 채택(2010.11. 정상회의)
-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로 하락한 세계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신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과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 공조 등도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 및 투자 확대, 구조 개혁, DDA 타결, 무역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

2)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IMF의 쿼터 검토,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혁의 조기 이행 촉구, 국제금융기구 추가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IMF 14차 쿼터 일반 검토가 2011년 1월에, 세계은행의 지배구조개혁이 2010년 봄에 예정되어 있음. 또한 위기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짐에 따라 위기에 대한 IMF의 감독 기능 강화, 대외충격에 취약한 개도국의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금융안전망 확충 등의 논의가 필요함. 다자간 개발은행(MDB)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규제 개혁

- 2010년 정상회의는 현재 국제기구에서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 첫째, 은행자본. 특히 미국의 관심 의제로 자본적립 규모를 확충하고 자본의 질을 보통주 중심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 중임.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10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은행자본에 대한 최종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둘째, 보상체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보상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보상체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규제방안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2010년 3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상규제 이행 현황 점검과 추가 조치 제안이 계획되어 있어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는 201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셋째, 대마블사. 현재 거대 금융기관의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 중이며, 2010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점검과 최종적인 추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①위기대응그룹의 구성, ②금융기관 자체 위기대응 계획 마련, ③초국적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국제 원칙 마련, ④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강한 건전성 규제 적용 방안 마련 등.

4) 개도국 지원

- G20에서 배제된 최빈국·개도국들은 여전히 G20 체제에 대해 비판적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석 이유가 “세계 85% 국가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G20 정상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언급했음. 2010년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문제와 최빈국·개도국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G20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을 고려하고, 논의 의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필요시 최빈국·개도국 대표 국가를 정상회의에 직접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함. 또한 비참여국의 의견을 의제 설정 과정부터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2. G20 송도회의서 핵심의제 로드맵 마련(연합뉴스, 3/2)

- 지난달 27~28일 인천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의 논의체계나 일정을 마련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조율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전략을 가다듬는 탐색전 성격이 짙었다.
- 이번 회의의 성과는 주요 의제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무역불균형 문제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으로도 불리는 이 의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 불균형 해소, 선진국과 후진국 간 개발격차 해소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에서 빚어진 재정건전성 확보도 여기에서 다뤄진다.
- 금융안전망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한 뒤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최종 보고서를 올리기로 했다. 또 세계은행(WB)의 투표권을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이 시한인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문제는 가급적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매듭짓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하지만 의제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각국이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무역불균형 해소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중국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경제위기 발발시 신흥국의 외환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자본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한국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안전망 구축문제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은 지지입장을, 유럽 국가들은 실효성 등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안전망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며 "6월 부산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중간보고서를 제출기로 했기 때문에 11월 정상회의에서 진전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금융규제 역시 G20 틀 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합의가 나올지 의문의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의 '볼커룰'에 대해 유럽이 부정적인데다 이제 막 자본시장을 키워가야 할 입장인 신흥국도 부담스런 의제다. 또 금융규제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IMF나 세계은행의 구조개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볼커룰은 공적자금을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 업무에 넣는 것을 규제하지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관련,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볼커룰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규제방안을 일컫는 말이다.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제안이 대폭 반영되었다고 하여 '볼커룰'이라 불린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거래를 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소유,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방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월가의 은행들에 일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월가 대형은행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볼커룰이 적용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골드만삭스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반적인 사모펀드 업체들에 비해서도 사모펀드 운용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3. G20관련 공식회의 주요일정(연합뉴스, 2/25)

날 짜	회 의	장 소	의장국	비 고
2.27-28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인천	한국	2.26 금융안전망 비공식 워크숍 개최
3.31	워크숍	중국	중국	국제금융기구 개혁
4.2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미국 워싱턴	한국	IMF, 세계은행 춘계회의 연계
5월 중	워크숍	캐나다	캐나다	프레임워크 논의
6.3-5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부산	한-캐 공동	6.3 차관 회의 6.4-5 장관 회의
6.26-27	4차 G20 정상회의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7월 중	워크숍	프랑스	프랑스	금융규제 추가개혁 과제
9월 초순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광주	한국	
9월 중	워크숍	사우디	사우디	에너지
10월 하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경주	한국	
11.11-12	5차 G20 정상회의	서울	한국	APEC 정상회의 (11.13-14, 일본 요코하마)

(자료: G20 정상회의 준비위)

* 참고: G20 관련 사이트

- 서울 G20 정상회의 사이트(영문) <http://www.g20.org/>
- 정부 홍보 사이트 <http://2010g20.korea.kr/>
- G20 모니터링 사업단 <http://g20.kangwon.ac.kr/>
- 토론토대학교 G8 정보센터(영문) <http://www.g7.utoronto.ca/>

* 약평: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부터는 본격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27~28일에 열린 재무차관 회의에 따르면, 무역불균형 문제와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굵직한 과제입니다. 급격한 외환·자본 유출을 방지하지는 금융안전망 논의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제시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G20에 연이어 APEC 정상회의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대해서도 귀추를 살펴야겠습니다.

■ 민중운동

1. 민주노동당

1) 임시당대회

- 436명의 대의원(재적인원 712명)이 참석. 2010년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당헌 부칙11조 신설의 건'(2010년 6월2일 전

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 통과

-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당 중앙위원회가 공직후보를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하지만 앞서 열린 7차 중앙위에서 3월1일(7차 중앙위) 이후 공직후보 인준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함으로써 이후부터는 6.2지방선거 공직후보 인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중앙위 회의에선 정권의 탄압으로 당 투표시스템이 막혀 있어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공직후보 선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으로 이번 선거에 한해 후보자 선출 특례를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 임시당대회에 제출했다. 부칙 11조(2010년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를 신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 2010년 지방선거 목표로는 △이명박 정권 심판 △진보정치의 재도약 발판 마련, △2012 승리의 디딤돌 확보라는 정치적 목표와 함께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10곳 이상 당선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수 당선 △출마자 평균 15% 이상 득표, 정당지지율 15% 확보를 득표 목표로 내세웠다.

- 지방선거 사업계획엔 반MB 선거전략의 기본 원칙도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야5당 협상회의' 등 야5당과 시민사회의 반MB 선거연합을 주도적으로 실현해나가고 △최소강령과 핵심정책 합의에 기반한 정책연합, 야당탄압 분쇄와 현안 공동대응 등 투쟁을 통한 정치연합, 연합공천과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연합 등 연합의 수준과 범위를 입체적으로 높여가면서 반MB 연대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2) 김수행-유팔무 민주노동당 입당 (레디앙, 2/26)

"힘이 되고 싶어서"...강기갑 "바람 불수록 연 높이 날아"

-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유팔무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서유석 호서대학교 교수 등 진보계 학자들이 25일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이 중 김수행 교수는 후원당원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노동자들의 집단 입당과 24일 대학생들의 집단입당에 이은 '민주노동당 지키기' 입당식을 이어갔다.

- 이날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팔무 교수는 "민주노동당 창립시기부터 당원으로 수년 동안 활동하다가 중간에 여러 이유로 탈당했었다"며 "민주노동당이 분당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정부로부터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입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한 "민주노동당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앞으로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진보세력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를 냉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 진보정당들과 손을 잡고 한국사회 민주화를 심화 확장시키고 민생 복지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3) 울산-전북 노동자 450명, 민주노동당 입당 (레디앙, 2/23)

노동자 "힘이 되어주겠다"...권영길 "정권이 죽이면 노동자가 살린다"

- 검찰과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칼 끝을 민주노동당으로 향하면서 민주노동당이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가운데, 23일 울산과 전북지역의 노동자 450명이 민주노동당에 집단 입당했다. 검경의 압박에 역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성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입당한 노동자들은 각각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북본부 차원에서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과 검·경 공안당국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자 반MB연대연합에 금이 가게 하려 민주노동당을 표적수사하고 탄압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감추지 않는 가운데 오늘 450명의 노동자들의 집단 입당은 검·경 공안당국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 정치수사에 맞선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외침"이라고 말했다.

-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영태 금속노조 울산지부 세종공업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집단 입당 동기는 민주노동당이 창당하고 지금까지 활동한 것이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을 해왔고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 정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해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힘이 되어주자 해서 입당했다"고 말했다.

2. 사회당 45차 중앙위원회

- 3월 1일, 사회당(대표 최광은)이 45차 중앙위원회(의장 엄균용)를 열고 '기본소득 연합'을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2010 지방선거, '기본소득 연합'으로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사회당은 결의문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연합의 하나로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기본소득 연합'을 함께 만들자."라며 "기본소득 연합은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연합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회당은 결의문을 통해 "기본소득을 내건 모든 후보를 지지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틀이 될 것이다."라며 "기본소득 연합은 기존의 낡은 틀로 구획된 모든 경계를 가로질러 실질적으로 진보를 재구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3.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발족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진보대연합 촉구(참세상, 2/28)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촉구하는 교수 연구자들이 2월 25일 한국건강연대 3층에서 기자회견과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까지 146명이 제안자로 참여해 정식으로 발족식을 거행한 교수연구자 모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4 연석회' 주도의 민주대연합에 대해 "민주당이 과연 반MB대연합을 주도할 만한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패권주의적 작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수연구자 모임은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의 진보대연합으로서 일단 먼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의 정치세력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날 발족식에서는 김세균(서울대) 교수가 상임대표로 노진철(경북대), 손호철(서강대), 양해림(충남대), 우희중(서울대), 이민환(부산대), 이정호(방송대), 이중호(전북대), 정영태(인하대), 조돈문(가톨릭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발족식에 이어 최갑수(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진보대연합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민주노동당 이수호(최고위원), 진보신당 정종권(부대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고민택(팀장), 사회당 금민(전 대표) 등 4개 정치세력에서 발제를 하고 손호철(서강대), 조돈문(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을 하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발족식 행사를 마쳤다.

■ 노동

1. 총연맹

1) 사무처 개편

- 민주노총의 사무처 개편은 ▲사무처장 체제를 사무부총장 체제로 전환 ▲기획실 신설 ▲총무실 신설 ▲파견 및 신규채용 4명 ▲인사이동 10명 ▲교육국 조직실 이관 등으로 진행됨.

- 조직실장 이양수(전 기아비정규직분회장/파견) 대협실장 양태조(전 조직실장) 사무부총장 이수봉(전 대변인 및 연구원 원장) 대변인 겸 홍보실장 정호희(운수노조 전 정책실장) 고용안정센터 소장 기형로(전 대협실장) 등임.

2. 금속노조

1) 대림자동차지회 본관 점거농성

- 1일 저녁부터 조합원 40여명이 대림자동차 본관 옥상을 점거했음. 사측은 새벽 두시 본관 단전, 단수 및 정문을 컨테이너로 막아 출입 통제 중.
- 노조의 요구는 정리하고 철회 및 노조탄압 분쇄.
- 2륜차 생산업체인 대림자동차 사측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위기를 빌미로 293명 정리하고, 200여명 강제희망퇴직, 10명 6개월 휴직, 47명 정리하고 등을 저질러왔음.

2) 한진중공업지회 협상 타결

- 약 1000여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하려고 했던 한진중공업 사측은 한진중공업 지회가 전면파업을 선언한지 10시간(26일)만에 협상을 통해 노사협상을 통해 합의도출.
- 합의안은 1. 회사는 2009년 12월 18일부 인위적인 구조조정 (일방적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26일부로 중단한다. 2. 노조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한다. 3. 노사는 2009년 임단협을 진행한다. 4. 노사는 회사 생존을 위하여 수주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 그러나 사내하청 3800명 중 약 1200여명이 해고되었음.

3)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금타 워크아웃 돌입 후 2월1일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371명 정리해고 ▲1천6백명 도급전환 ▲기본급 20% 삭감 및 3년간 임금동결 ▲각종 수당 삭제 ▲단협후퇴 ▲복리후생제도 폐지 등의 안을 제시.
- 이어서 2월11일 사측은 상여금 300% 삭감을 조건부로 정리해고 철회하고 아웃소싱은 그대로 단계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 이후 6일간 178명의 노동자가 퇴직. 그러자 다시 사측은 명퇴로 줄어든 노무비를 감안하여 상여금 200% 삭감안을 수정제시하고 아웃소싱은 명퇴를 감안하여 우선 추진 공정을 선택하여 단계적 추진 안을 제시함.
-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명퇴 인원 감안 정리해고 인원을 193명으로 하여 3월 3일 통보하고 아웃소싱 1천 6명은 일시에 시행한다고 협박.
- 3월2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측은 1199에 대한 해고방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파장 예상.
- 노조는 정부에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며 5,6일 광주공장 파업결의대회,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예정.

4) 금속노조 특단협

- 금속노조는 '노조전임자 활동 및 산별교섭권 보장을 위한 금속노조 특별교섭' 요구하고 2월 23일 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울산, 포항, 충남을 제외한 11개 지부에서는 결렬.
- 사용자측의 거부내용은 '4월 30일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교섭 가능',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조법과 위배되는 노사합의는 위법(부당노동행위)'이라고 주장.

5) 금속노조 2010년 산별교섭 공동 요구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 5,464원 ▲청년실업 등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 노동자 관련 요구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금 및 퇴직연금 ▲노동권보장을 위한 요구 등 여섯 가지임.
- 청년실업 등 일자리 만들기의 세부내용으로는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은 반드시 신규 채용할 것 △5년 평균 당기순이익 증가 비율만큼 신규 채용할 것 △신규채용 확대 시 비정규직이 있는 사업장은 해당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신규 채용 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것 등이 담겨있음.
- 비정규직 관련 요구의 세부내용은 △사내하도급 제한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신설요구안도 포함. 세부 내용으로 '동일가치 노동' 판단기준을 마련할 노사공동조사연구위원회 구성을 제시.
- 이 밖에 퇴직금 관련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도 요구할 예정임.

3. 교사, 공무원, 공공

1)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 3일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재반려했음. 이유는 아직까지 해직자가 공무원노조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에 의거 노조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 8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임.
- 이후 공무원노조는 투쟁본부로 전환, 3월20일부터 대규모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 함.

2)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및 철도노조 대응

- 철도노조 조합원 1만 4천명이 허준영 사장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음. 허준영의 파업 유도 및 징계에 맞서 1인당 100만원씩, 총 1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현재 징계자 대상자는 1만 1천 390명이고 이 중 193명 해고, 435명 정직, 감봉 6천 55명, 견책 748명 등 총 7천여명에게 징계를 내림.

4. 기타

1) 철도노조 상반기 투쟁계획 수립

- 철도노조는 23일 충남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투쟁계획을 논의. 노조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과 대량징계를 비판하고, 4월 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함. 지난해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따라 5월 24일 단협이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철도 노사 간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해 보임.

2) 화물연대 상반기 투쟁 안

- 화물연대는 대대를 통해 표준운임제 법제화-화물운송제도 개선-노동기본권 쟁취-운송료 인상 등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4-5월 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음. 이를 위해 권역별 집회와 상경투쟁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

<끝>